

최저가낙찰제 100억 이상 확대 땐 호남 건설사 피해 ‘눈덩이’

## 수주액 2377억·일자리 1922개 감소

### 민주당 이용섭 의원 건설협 자료 분석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중소건설사의 경우 2377억원의 수주액 감소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따르면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

로 내년부터 가격경쟁 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 물량 감소분이 710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호남권이 2377억원, 영

남권 2577억원, 충청권 1562억원, 강원·제주 590억원 등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분야 일자리도 전국적으로 5750명, 호남권에 1922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물량 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및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입찰과 전략적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 일자리까지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고,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최고 가치낙찰제 도입이나 건설경기 회복 이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사 또 마찰

### 사측 “문답서 내지 않은 2052명 징계”

### 노조 “새 집행부 길들이기” 강력반발

금호타이어 노사가 노조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1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올 초 노조의 파업과 사측의 직장폐쇄 등으로 갈등을 겪다 정상화된 금호타이어는 최근 사측이 파업 참가자의 징계 여부를 놓고 노조가 반발해 또 다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사측은 최근 “과거 불법 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문답서를 사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문답서는 300여명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를 300여명과 지난 3월 말 시한부 파업 과정에서 바로 복귀

한 100여명은 면책됐다고 밝혔다. 문답서를 내지 않은 노조원은 2052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지식경제부 소속 민주당 김재규 의원이 19일 배포한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올 설날까지 일반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정책자금이 지역별 공급 액을 기준으로 수도권 10조 2460억원·영남권 6조 8997억원·충청권 8만 1231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1조 7824억원에 불과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호남권(9만 6160개)은 충청권(8만 1231업체)에 비해 지원

대상 업체 수는 많은데 비해 지원

금액은 오히려 더 적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설·추석 명절자금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가장 적극적인 지원대책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기쁨의 단비와 같은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들어 이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영남권이 3억 2594만원으로 압도적 1

위를 기록한 반면, 충청권 8541만원, 수도권 7170만원이었고 호남권은 6003만원으로 끌어쳤다.

전체 규모 면에서 호남권 자금은 수도권의 1/7, 영남권의 1/4에 불과하고 업체당 평균 지원액도 영남권의 1/5밖에 되지 않았다.</